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광주·전남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환경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지난 3월 10일 "올초부터 이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폐수 무단방류와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배출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 조업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각 사업장의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시스템(TMS)이 지난달 초부터 본격 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환경관리청은 24시간 자동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활용, 먼지와 염화수소의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여수산업단지내 (주)와이엔텍과 여수석고(주) 등 2곳을 적발,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폐수를 무단방류한 U주유소와 Y세차장을 비롯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과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미설치 등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이밖에 장성군 D축산은 수질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여수시 D자동차공업사는 기준치를 넘는 부유물질 등을 내보내다 지적됐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적발된 업체 가

운데 8곳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세차장과 경정비 업소 등이었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청 관계자는 "여수와 광양산업단지 내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5곳에 배출물질의 농도와 양 등을 측정하는 TMS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이번에 2개 업체가 적발됨으로써 TMS의 효율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 경기도, 공공건물 중수도 설치 의무화

앞으로 경기지역에서 운동장·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공공시설 및 공장은 올하반기부터 중수도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난 3월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물의 재이용과 절수를 위해 올해부터 지붕면적이 2400㎡ 이상이고 관람석수가 1400석 이상인 운동장·체육관 건립을 할 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조만간 제정키로 했다.

빗물이용시설은 환경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빗물을 모아 조경용수, 화장실 세정수, 기타 잡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환경시스템중의 하나다.

도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또 올하반기부터 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강제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중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상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6만㎡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항만시설, 업무시설, 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과 하루 폐수 배출량이 1500㎥ 이상인 공장 등이다.

## 정부, 소음·분진제거 장비개발

기획예산처는 근로자들의 3D업종 근무기피 해소를 위해 작업장의 소음·냄새·분진 등을 줄이는 장비개발사업에 올해 14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 3월 8일 밝혔다.

예산처는 용접, 금형, 주조, 열처리, 도금, 염색가공 등 7개 생산현장분야의 5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5억원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3개 이상의 실수요업체와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상은 고온·고압·소음 등 위험요인발생제거장비개발 등이다.

## 특별설비자금 5천억원 공급

산업은행은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키고 경제성장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저리의 특별설비자금 5천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산은은 5천억원의 자금은 지난 3월 8일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나 자본재수입 등 설비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행금리는 6~8%로 국내 설비자금 대출중 최저수준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고 산은은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대기업 200억원, 중소기업 100억원이다.

## 하수처리장·매립지 내진설계 의무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폐기물 매립시설 등도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외에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송유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등 6개 시설을 추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축물·도로·원자로, 다목적댐·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시설, 공항·철도·항만시설, 화학류저장소 및 취급소, 석유 저장시설 등은 내진설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추가되는 6개 시설중 가스·석유·폐수 등은 2차적인 피해를 수반해 대규모 재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이 우려

되는 시설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프트와 크레인, 압력용기 기준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나머지 송유관과 폐기물매립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체적인 내진설계기준·방법 등은 소관 부처별로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연간 100만명 이상의 인구나 100억 이상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로 지정된 6개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가산업단지 전국 첫 공동환경관리

전국 처음으로 울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공동환경관리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오는 7월부터 국가산업단지내 환경관리권이 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사무인수·인계 등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공동관리에 들어간다고 지난 3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와 낙동강환경청은 3개 반 12명의 공동환경특별점검반을 편성, 업무인수·인계 완료시점인 오는 6월말까지 국가산업단지내 1천148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수질 등 환경관리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악취 등 공단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민원 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을 펴게 된다.

이번 공동환경점검반에는 차량 2대와 대기시료 채취기 2대, 악취샘플러 5대, 사진기 3대, 악취포집백 등의 장비를 투입하며 각종 오염도 검사는 양기관이 공동 분석하되 행정처분은 낙동강환경청에서 실시키로 했다.

울산국가산업단지는 울산·미포가 46.22km<sup>2</sup>, 온산 24.66km<sup>2</sup> 등 총 70.88km<sup>2</sup>이며 관리대상 업체는 1천148개(울산·미포 781, 온산 367), 연간 연료사용량은 2000년 기준시 전체의 98.8%인 1천926만6천919t에 이른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동환경관리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업무공백 최소화로 국가공단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 냉장고등 6개제품 환경성적공개

앞으로 가정용 냉동·냉장고와 TFT-LCD 모니터, 브라운관용 유리, 자동차용 휘발유, 승용차용 타이어, 두루마리 화장지 등 6개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이 공개된다.

지난 3월 5일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작성지침과 인증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기준에 따라 환경성적을 인증받은 제품은 환경성적 인증제품'(EDP:Environmental Declar

ation of Products) 표지를 부착해 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 인증제품은 기업이 제품 생산에서부터 사용후 폐기 단계까지 발생하는 자원소모와 지구온난화,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 6개 범주의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산출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인증을 거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수치로 제품과 포장 등에 표시한 것.

현재 미국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녹색 소비자들의 환경친화적 제품 수요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오염 사전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대상제품 선정과 인증심사원 교육체계 구축, 심사원 확충 등의 준비작업을 해왔으며 올 하반기부터 대상품목을 TV와 자동차용 에어컨필터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환경개선부담금 채납률 1% 낮추기 운동

경기도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채납률 1% 낮추기 운동'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최근 도(道)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채납률은 11% 73억여원으로 2000년말 109억원보다 36억여원이 감소됐다.

그러나 아직 채납률이 10%를 넘어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시·군 담당과장을 단장으로 총괄·징수·홍보 등 3개반을 편성해 채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1단계로 조사대상 시설물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기본현황자료를 조사하고, 2단계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고액 채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을 실시한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을 탈루하거나 연료·용도·지하수 사용량 등 기초자료를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는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을 적용,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도는 환경개선부담금 자진납부 홍보를 위해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법과 감면규정, 질의답변, 심사청구 사례, 부담금 산출방법, 납부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 전북도, 미생물로 축산분뇨 악취 제거

전북 익산시 왕궁면 집단농장의 축산분뇨 악취가 유효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로 제거된다.

전북도는 호남고속도로 익산-전주 구간에 위치한 왕궁면 축산단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오는 6월 월드컵 축구대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으로 판단, 이를 제거키로 했다.

도는 우선 전주대 EM단지에서 직접 배양한 유효 미생물 활성액을 왕궁면

구덕리 익산농장과 신촌농장, 온수리 금오농장 등 18농가 5천500평(전체면적의 5.5%)에 살포한 뒤 효과가 좋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효 미생물은 광합성 박테리아와 유산균, 효모균을 주군(主群)으로 해 합성한 미생물로 토양에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제거되며 발효가 끝난 축분은 양질의 부산물 비료로 사용된다.

유효 미생물은 또 토양에서 축매역할을 해 자연계에 이로운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해로운 것은 제거해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며 토양내 다이옥신 분해능력이 뛰어난 데다 폐수 정화능력도 우수해 일본에서는 친환경 농업자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262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악취에 대해서는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곳 왕궁단지는 2천여채의 축사(10만평)에서 돼지 10만여 마리와 닭 15만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하루 1천t에 달하는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549억원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크게 늘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도에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549억원으로 지난해 436억원보다 25.9% 증액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올해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모두 2천 551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464억원,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에 50억원, 춘천·원주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17억원, 녹조방지사업에 19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산업비 50억원은 춘천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과 원주 의료기기진흥센터 등의 환경친화형 산업 육성에 지원된다.

## 사전환경성검토제 강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활용돼온 '소규모 분할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최근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해 시행하는 개발사업도 전체 개발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토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미만의 사업이라도 연결해서 개발면적을 계속 확대할 경우 과거 10년간 개발한 면적과 추가 개발하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면적의

130% 이상이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의 경우 1만㎡ 이상의 개발사업만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이라도 1만㎡ 미만으로 분할해서 개발하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돼 개발업자들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한편 개정안은 사업승인 기관장이 사전환경성 검토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환경관서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 폐수활용 소수력발전소 건립

충북도내에 처음으로 폐수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소가 설치되고 풍력을 이용한 발전소가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경제난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종합 대책을 마련, 소수력발전소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수력발전소는 국비 2억1000만원과 청주시 예산 9000만원을 들여 청주시환경사업소에 시간당 80kW, 연간 595.6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

이 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최종 배출되는 방류수를 3.2m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3월 착공,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 시설이 완공될 경우 청주시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10% 정도를 충당하게 되어 연간 38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하수처리장 방류수 공업용수로 재활용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공업용수로 재활용된다.

인천시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공업용 냉각수로 재활용하기로 INI스틸(주)과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기업에 무상으로 공급돼 재활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좌하수처리장에서 1, 2차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방류수는 하루 평균 26만t에 이르고 있으며 INI스틸은 이 가운데 7.2%인 1만8천700t을 공급받아 역삼투압방식의 재활용 공정 등을 거쳐 냉각수로 사용하게 된다.

INI스틸은 지난 3월 시(市)와 방류수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77억원을 들여 가좌하수처리장과 인천시 동구 송현동 공장을 연결하는 배관작업 등에 착수했다.

INI스틸은 현재 수도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방류수를 재활용할 경우 4년 후부터 투자비를 회수하는 등 연간 수억원의 상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